

중국 식품관리제도

주중대한민국대사관 食藥官 田銀淑

1. 머리말

지난 수년간 국제적으로 전세계 소비자들이 우려할 만한 식품안전 관련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금년에는 연초부터 미국에서의 광우병과 우리나라를 포함 아시아 각 지역의 조류독감 발생으로 식품안전 문제가 다시 우리 소비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의 하나가 되었다. 이와 같은 식품 안전 사건들은 사건이 발생한 그 나라 경제에 심각한 손해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은 정도에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수입국의 입장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각국 정부는 문제가 되는 국가나 지역의 식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소비자에 대한 홍보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 하게 된다.

지금 전세계의 소비자들은 WTO 체제로 인한 세계 경제의 일체화로 각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식품을 값싸게(?)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고 있는 반면, 다른 나라의 식품안전 문제가 자신이 소비하는 식품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직시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안전한 식품을 소비하고자 하는 요구와 함께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의 폭도 넓어지고 우

려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관심사를 반영하듯, 각국 정부는 식품안전관리 체제와 법률 등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 최근 미국의 바이오테러대응법을 제정, EU의 식품청 출범, 일본의 식품안전법 제정, 한국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의 제정, 중국의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출범 등을 들 수 있겠다.

이에 앞서 2000년도에 WHO는 “식품안전협약”을 통해 전 세계의 식품안전 추진전략을 제정하고 식품안전을 공공위생의 최우선 영역으로 확정하는 한편, 회원국이 이에 상응하는 행동계획을 제정하여 식원성 질병이 공중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을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각국에서 취하고 있는 식품안전 강화 조치들이 무역 상대국에는 비관세장벽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 국가간 통상마찰로 비화되기도 한다. 세계 제11대 무역국인 우리나라도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미연에 방지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수입국들의 식품 생산 환경, 기준·검사 및 관련법규 등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100여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각종 식품을 수입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수입되는 식품의 양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필자는 본고에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그 안전성에 대해 가장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 국가의 하나인 중국의 식품 안전관리 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국의 식품관리 및 안전성 관련 연구나 구축된 정보는 양국간 무역규모에 비하여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그동안 우리의 수입식품 검사제도가 여건상 통관단계에서의 검사에만 의존한 것도 있고, 중국 자체의 자료도 없어서 이기도 한데 중국이 그동안 식품안전 보다는 생산력 향상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일반에 공개되는 정보는 대개 국가정책의 홍보성격이 짙어 실제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 수집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식품교역 규모와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관심을 고려하면 그 어느 나라 보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관련 자료와 정보를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집하여야 할 것이다.

수년간 중국의 식품산업은 고도성장을 유지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하고 품질, 등급, 기능과 포장 등의 측면에서 자국민의 소비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안전성 문제에 관하여는 중국의 소비자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식품오염의 “원인의 근원을 찾기 어렵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형편이다. 중국 정부당국도 식품안전은 매우 중대한 공중 위생문제 중 하나로 국민에게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三 代表” 사상의 구체적인 실천이며, 샤오강(小康)사회를 건설하는 주요소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수출국에서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자국의 식품안전 문제가 국가 신인도 뿐 아니라 수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각 부서가 품질과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바야흐로 중국의 식품산업도 과거의 생산력 향상에서 품질 안전으로의 큰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과 조치들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는 있으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필자는 여기서 지면 관계상 우선 중국의 식품산업 현황과 식품관리 체제 및 안전성 현황 등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2. 식품산업 현황에 대하여

중국은 식품 생산과 소비의 대국으로 식품산업은 수년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2003년도에도 중국 본토에서 크게 유행한 사스(“급성호흡기증후군”)의 발병에도 불구하고 전반기 식품산업 총생산액은 5959.21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2%의 고도 성장을 이루었다.

최근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산업경제연구부가 발표한 《중국산업발전추적연구사업 2003년 연도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식품산업은 좋은 발전 추세를 보였으며 각종 경제지표가 모두 안정한 성장을 이룩하여 식품산업은 새로운 경제 성장의 기둥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식품산업 성장은 물론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먹거리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소비패턴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다. 식품산업 중에서도 몇몇 고성장의 업종이 형성되었는데, 예를 들면 유제품업, 수산물가공업, 기타 식품가공업 등 소득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종들의 발전은 다른 업종에 비해 훨씬 신속하여 식품산업의 전반적인 경기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향후 식품산업은 자동차, 석탄, 기계 등과 함께 중국 경제를 이끌어 갈 주도산업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식품산업이 농업의 발전과 재배 구조조정 등으로 생산량이 증가하여 원료의 공급이 충분한 한편, 국민의 소득 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양적으로나 질적인 면에서도 시장의 확대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아울러 시장경제 체제의 가속화와 현대적인 기업구조로의 개선은 식품산업에 유리한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중국정부는 국가프로젝트인 “서부대개발”을 중국 식품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다. 서부지역은 육류, 난류, 우유, 식량류, 설탕, 식용유, 다류, 채소, 과일과 각종 한약재 등 야생자원이 풍부한데, 이미 설탕, 유제품, 육가공품은 상당한 규모를 갖추어 전국적으로도 비교우위 산업이 되고 있다.

아울러 중국정부는 2005년 일인당 GDP가 9400 위엔으로 소비구조 특히 식품의 소비구조가 크게 변화하는 시기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외부요인으로는 WTO의 가입이 식품산업에 외국자본·기술·경영·관리경험을 이용할 수 있고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호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바탕으로 2005년까지 추진하는 “十五계획” 중 식품산업 분야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는데, 동 계획의 주요목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가. 국내외 시장의 수요에 따라 농업자원을 이용하고 심층·정밀가공 식품을 발전시키는 한편, 신상품을 개발하고 중국 전통식품의 수준을 향상시키며 상품구조를 개선한다.
- 나. 농업산업화와 판매를 긴밀히 연계한다. 즉,

농업생산구조와 농산물 구조조정을 주도하고, 유기식품, 무공해식품 등의 제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농민 수입을 증가시킨다. 아울러 식품공업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적재산권이 있는 제품의 개발을 장려하고 유명브랜드 전략을 추진한다.

다. 영양과학 원칙을 중시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부합되게 한다.

라. 식품품질 안전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식품과 원료의 품질안전의 감독·관리·검사체계와 “시장진입제도”를 건립 또는 개선한다.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 및 권익을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마. 식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되, 식품산업의 오염 통제, 청결생산, 원료 생산지 환경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바. 산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원료의 생산은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지역에 집중시킨다. 즉, 동부와 중부의 식품산업 발달지역은 하이테크기술을 응용 발전시키고 서부지역은 비교우위의 특화 상품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킨다.

사. 기업의 소유 구조를 조정하여 다양한 형태를 갖도록 한다.

아. 무역·과학·공업·농업을 결합하여 대기업을 양성·발전시킨다.

특기할 점은 상기 목표에서 나타나 있듯이 중

국정부는 식품산업의 100대 기업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 대기업을 통하여 식품산업의 구조 조정을 달성하고 이들이 중국 식품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3. 관리체제에 대하여

중국의 식품관리는 중앙과 지방의 이원체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중앙이 법령과 제도 등을 관장하고 지방은 각성·시·자치구 별로 해당 법령의 집행에 책임을 지고 있다. 물론 지방이 중앙의 법령과 제도를 각 지역의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시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긴급한 식품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중앙에서 직접 관계관을 각지에 파견하여 조사 지도하고, 사안에 따라 전국적인 식품 감시·감독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도 한다.

한편,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식품 관리부서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사안별로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종합조정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부서의 분산으로 행정의 중복과 비효율성이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국내적으로도 식품관리의 일원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시키는데 2003년도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존의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위생부가 담당하던 업무 일부가 이관 받아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하 “식약감국”, 영문 SFDA)”으로 새로이 출범하였다. 그러나, 긴급한 식품 위해상황 발생시 각부처의 종합조정하는 역할만이 추가로 부여되었을 뿐이고, 아직까지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식품관리 일원화와는 거리가 있는 체제이다. 어느 나라든 여러 부처가 관장하는 업무를 단번에 한부처로 일원

화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식품관리와 관계가 있는 중앙부서로는 식약감국, 위생부, 농업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약칭 “質檢總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公安部, 상무부, 국가발전계획위원회, 교육부, 과기부, 국가환경보호총국 등이 있는데 이중 주요부서의 식품관련 담당업무는 대략 다음과 같다.

가. 식약감국은 식품, 보건식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감독을 책임지고 중대한 사고 발생시 조사 및 처리 업무를 수행을 주관한다.

나. 위생부는 보건·의료·위생 업무를 관장하고 식품의 기술규범과 위생기준의 제정 및 그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 식품위생에 대한 정기적인 감독관리와 위생허가증발급에 책임이 있고, 학교급식과 요식업에 대한 위생 감독을 수행한다.

다. 농업부는 농업·어업·축산업의 발전계획 수립 및 실시, 관련법령을 관장하며 동식물 검역업무 등 농업분야 업무 총괄 수행한다. 아울러 농산품 표준화생산기지의 건설을 추진하고 농산품 품질안전 정기감시제도를 실시한다.

라. 질검총국은 상품(식품, 농산품, 수산품, 화장품, 의약품, 공산품 등)의 품질·계량업무를 총괄한다. 또한 수출입 상품 검사, 위생 검역·출입국 동 식물 검역, 인증 인정·표준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마. 상무부는 식품유통에 대한 지도와 관리 및

식품검사측정시스템 구축에 책임이 있다.

는 상황에 이르렀다.

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식품 생산경영기업 및 개인기업에 대한 영업허가 업무와 식품관련 허위광고와 상표권 침해 단속 업무를 수행한다.

셋째, 식품의 신기술·신자원(유전자재조합식품·효소제 및 식품의 새로운 포장재료 등)이 식품안전에 또 다른 도전을 가져오고 있다.

사. 과기부는 식품의 안전성 수준 제고를 위한 연구사업 등을 수행한다.

넷째, 중국 식품생산경영기업의 규모화·집약화 정도가 비교적 낮으며, 자체관리 수준도 여전히 열악하다.

상기와 같이 식품관리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기관이 7개에 이르는데, 이 중 식약감독, 질검총국, 위생부, 농업부가 담당 주요부서이다.

다섯째, 식품을 이용한 범죄 혹은 테러행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여섯째, 식품안전감독관리의 조건·수단 및 예산이 부족하여 실제적인 업무상에서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4. 식품의 안전성 현황

한마디로 중국 식품의 안전성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못했고 중국의 식품위생 기준과 국제 기준간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식품안전 분야의 개선은 다른 산업 분야의 발전속도와 비교하여도 상당히 뒤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식품안전에 대한 문제점은 중국 국내에서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2003년 8월 중국 위생부가 발표한 향후 5년간의 식품안전 분야 중점추진 업무계획인 “식품안전행동계획”에 자국이 직면한 식품안전 문제가 잘 나타나 있다. 동 문서에서 제기된 문제점은 크게 다음 6가지로 분류된다.

중국의 언론들도 중국 식품 중 많은 오염의 원인에 대하여 한마디로 “그 근원을 찾기 어렵다”고 표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근원적인 오염을 지적하고 있다. 화학비료, 농약, 수의약, 성장조절제 등의 사용이 올바르지 못하여 농토를 오염시키고 농·축·수산물의 농약과 수의약 기준 잔류 문제를 야기시킨다. 수원이 되는 강·호수·바다의 오염도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이다. 지난 수년간 사료에 불법으로 첨가한 호르몬과 성장 촉진제 등으로 소비자들의 식품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 왔다. 심지어는 채소와 과일에 과량으로 잔류한 농약과 불법으로 사용한 수의약으로 인하여 급성 중독을 일으킨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즉, 첫째 식원성(食源性) 질병이 여전히 대중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수입국에서 발생한 중국산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국가의 신인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받은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가금류의 수의약 잔류, 다류의 농약잔류, 벌꿀의 항생물질 잔류 문

둘째, 새로운 생물성·화학적 오염물질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

제로 EU로의 수출에 타격을 받았고 일본에 수출한 냉동 채소류에서 검출된 농약으로 관련 산업체가 심각한 경제적인 피해를 받았을 뿐 아니라, 일본정부는 이를 계기로 중국산 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로 인하여 중·일 양국간 통상마찰이 있기도 하였다. 또한, 한국은 중국 측에 수출되는 한약재와 채소류 등의 이산화황과 농약 초과 잔류문제를 개선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독자 여러분도 아시는 사건인데 2002년에는 홍콩과 일본에서 유해약물이 함유된 중국산 다이어트 식품을 복용한 여성이 사망하여 국제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중국정부도 이 문제를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여 보건식품 기업과 판매소에 대한 대대적인 감시감독을 수행하고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해 허가취소 및 고발조치를 취한 바 있다. 나아가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법령의 보완과 생산시설에 대한 GMP(우수생산품질관리규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아름튼 중국 식품 중 많은 오염의 원인에 대해 “그 근원을 찾기 어렵다”고 했는데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 식품 중 위해물질의 오염상황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것 또한 중국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이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식품의 품질·안전관리의 근거가 되는 식품의 기준도 국제기준과 차이가 많은 것도 안전성에 염려를 하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5. 식품의 안전성 확보 추진정책

중국 정부는 자국의 식품안전성 확보가 국제경쟁력 강화의 필수요건이라고 판단하고 부처별로

경쟁적으로 각종 식품안전 정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그 내용이 부처간에 상당히 중복되어 비효율적으로 보이기도 하나,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향후 4~5년 내에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대표적인 정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농업부가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무공해식품행동계획”이 있는데, 북경, 천진, 상해, 심천 4개 대도시를 시범지역으로 정한 이후, 2002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동 계획이 목표하는 바는 농업부 등 관련 부처가 협력하여 농산물 생산·유통·소비체제와 제도의 개선을 통해 향후 5년 이내에 “식탁오염”을 해결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며 품질·안전수치가 선진국의 중간 수준 정도에 도달하는 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 야채, 과일, 차, 식용균, 축산물, 수산물 등과 같은 신선 농산물의 무공해 생산기지에 대한 품질 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이들 제품들 모두가 국가 기준에 적합하도록 한다.

나.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도매시장, 대형 농산물 도매시장과 체인점의 농산물의 품질 합격률을 95%이상 도달되게 하여, 식용 농산물의 급성 중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다. 수입 농산물의 품질 안전 수준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의 요구 사항을 대폭 강화하여,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이룬다.

라. “무공해식품”과 “유기식품”을 적극 육성한다.

농업부는 동 계획의 추진으로 가까운 기일 안에 채소류의 유기인 농약 초과 잔류 문제와 가축 사육 과정에서의 금지 약물을 남용 행위, 패류(貝類) 상품의 오염 및 수입 농산품 품질 안전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생부에서는 “식품안전행동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 8월 대외에 공포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주요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로 동 계획의 추진기간은 2008년으로 전체목표는 식품오염 통제, 식원성 질병 감소, 소비자 건강 보장 및 경제발전 촉진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설정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다음과 같다.

가. 비교적 완벽한 식품위생 법률·법규와 기준·규격체계를 확립한다.

나. 식품오염물질에 대한 감독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다. 식원성 질병의 예방 및 통제시스템을 확립한다.

라. 식품생산경영기업의 자체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식품안전감독관리 모델을 확립한다.

마. 식품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위생감독체제와 기술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작년 4월에 새롭게 출범한 식약감국에서는 “식품·약품안심공정”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동 공정은 주로 감시·감독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품질·위생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어 “오염의 근원에 대한 정비”와 “시장진입”의 두

부문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가짜 또는 저질의 곡류 등 양식류, 육류, 채소류, 과일류, 유제품, 콩제품, 수산품, 의약품, 의료기기를 생산·판매하는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무허가 생산·판매를 적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지면 관계상 생략하기로 한다.

끝으로 질검총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식품안전시장진입제도”를 들 수 있겠다. 동 제도는 크게 “식품생산허가제도”, “강제검사제도” 및 “식품진입명시제도(일명 QS표시)”로 구성되어 있다. 즉, 기본적인 생산조건을 갖추고 식품의 품질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업에 한하여 “식품생산허가증”을 발급하고, 이 업체들만이 허가된 범위 내에서 식품을 생산·가공할 수 있다. 또한 검사를 거치지 않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식품은 유통·판매할 수 없으며, 검사에 합격한 식품에 QS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하고 관련 행정부서의 감시를 편리하게 한다. 동 제도는 2002년 5개 품목류(쌀, 밀가루, 식용유, 간장, 식초)를 대상으로 북경, 청도, 대련 등 대도시에서 시범 실시하였고, 2003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5. 맺음말

질검총국이 2001년도 말에 최초로 실시한 바 있는 쌀, 밀가루, 기름, 간장, 식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5종 식품의 생산기업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상기 5종 식품을 생산하는 60,085개 기업 중 80%는 10명 이상 규모의 작은 공장이고 15.6%의 기업은 영업면허가 없으며 25%의 기업은 기업표준을 이행하지 않거나 아예 기업표준이 없었다. 또한

64%의 기업의 제품은 검사를 거치지 않고 출하하거나 아예 검사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본검사 대상 5만여개 제품의 평균 합격율은 60%에 불과하였으며 그 중의 간장, 밀가루, 식초의 합격율은 겨우 40% 미만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중국 식품 품질·안전 상황은 2~3년 전과 비교하여도 해마다 괄목할 만한 개선을 보이고 있다. 최근 각 부서가 발표하고 있는 감시·감독 결과를 보면 일부 상품은 합격률이 100%이거나 대부분 90% 이상이며 몇몇 제품만이 60~70%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검사 결과의 신뢰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앞에서 언급한 각 부처의 정책이 북경, 상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여러 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고 있는 것을 직접 목도할 수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수출하는 식품의 품질·안전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여 수출식품에 대한 관리와 검사도 강화해 나가는 추세에 있다. WTO에 가입한 후 중국이 예전과는 달리 수

출국의 부적합 판정 조치에 대하여 중국에서 수출한 식품은 선적 전에 검사를 실시하는 등 기본적으로 안전하다는 입장을 적극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듯 각국의 중국식품 관련 제재조치에 대하여 연일 언론에 무역장벽이라고 성토했던 기사가 자주 게재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 측 입장은 우리도 예의 주시하며 대처하여야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중국의 식품행정의 중복과 비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식품 품질·안전 상황은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을 바탕으로 정부 각 부처의 강력한 개선 의지와 추진으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지역간, 계층간의 소득격차가 커서 대도시에서 거두고 있는 효과가 농촌 지역 또는 소도시까지 고르게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중소 규모 이상의 도시에서는 향후 4~5년 이내에 기본적인 문제점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중국 식·의약품 관련 정보에 게재된 내용임.